



# 대통령 후보자들은 교육문제도 고민해야 한다

권태한 | 광운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

우리나라는 교육부장관을 부총리급으로 두고 있다. 국가적으로 교육부문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인식을 제도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모습이다. 교육인적자원부가 발표한 '2007년 OECD 교육지표'에 의할 때 한국의 공교육비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2%로 OECD 30개 국 평균치인 5.7%보다 크게 높다. 순서로는 아이슬란드(8%)와 미국(7.4%)에 이어 세 번째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높은 행정부처와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국가에서 현재 대선정국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지만, 교육분야에 대해서는 뚜렷한 정책들이 제시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그러한 아쉬움 속에서 다음 정권에서 고려되길 바라는 몇 가지 점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차기정부에서 가장 먼저 생각할 일은 교육부문의 생산성을 높이는 길을 찾는 것이다. 흔히들 교육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한다고 말한다. 국가경쟁력이 높아야 세계 속에서 나라의 위상이 높아지고 국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진다는 것인데, 그것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원동력을 교육에서 찾자는 뜻일 것이다.

교육부문의 생산성을 높이는 길은 교육부문에 존재하는 비효율적·비경쟁적 요소를 우선

적으로 제거하는 데 있다. 교육의 중요성을 이야기할 때, 흔히들 교육은 국가의 백년대계(百年大計)라 말한다. 교육이 장기적 비전과 계획에 의해 일관성 있게 이루어져야 하고 여타의 요인에 의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뜻을 담고 있다.

이러한 좋은 뜻의 경구(驚句)가 교육현장에서는 경쟁을 제한하고 비효율성을 누적시키는 논리로 악용되고 있다. 일관성(一貫性)이라는 말이 부동성(不動性)이라는 말로 잘못 이해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관성의 의미 속에는 부동성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그러나 한 부분일 뿐 그 모두는 아니다. 그런데 이러한 잘못된 인식이 교육현장에서 변화나 개혁에 반대하는 방패막이 논리로 사용되는 경우가 흔히 있다.

교육이 외부적 요인에 의해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의식은 교육현장이 무조건 보호되어야 한다는 폐쇄적 의식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과거 정통성이 문제가 되었던 권위주의적 정치체제하에서처럼 불합리한 비교육적 요소가 교육체계를 형클어 놓아서는 안 된다. 그러나 교육현장이 시대의 변화와 사회의 움직임과 동떨어져서 존재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그것을 잘못 이해하고 행동할 때 보호는 무경쟁을 낳고, 무경쟁은 무자극을, 무자극은

교육경쟁력 저하를, 그것은 또 다른 보호를 요구하는 악순환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백년대계의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고 교육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국민적 의식의 전환과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그러한 관점에서 교원평가제도의 도입과 교원인사제도의 개선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지방대학에 지원해온 정책이 대학교육의 경쟁력 제고에 얼마만큼 기여했는지도 평가되어야 한다. 학제적 결합을 통해 새로운 교육체계를 구축하거나 새로운 교과과정을 만들어 내는 교육기관에게는 과감한 재정지원을 해야 한다. 교육기관을 평가하는 방식도 기존에 쌓여진 것을 주요 지표로 하던 방식에서 새롭게 이루어진 것을 중시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학교 간의 불균형과 그에 따른 비효율성은 시정될 길이 없다.

교육부문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노력과 더불어 또 하나 고려해야 할 정책은 우리나라의 교육을 수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국제교류의 관점에서 교육부문은 수입보다 수출이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국가적으로 더 유익하다. FTA 협상에서도 볼 수 있듯이 교육경쟁력이 높은 나라가 자국의 교육을 수출하고자 하는 의도를 강하게 내보이는 것도 바로 그 이유 때문이다. 그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수입하는 국가 측에서 제도적으로 방어를 하기 때문이다. 우리도 그랬던 나라이다.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면서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유학을 꿈꾸는 외국인이 늘어나고 있다. 그 중에는 한국으로 유학 와서 공부하는 사람도 있지만 경제적 이유로 한국의 교육을 현지에서 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더 많다. 따라서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교육기관이나 교육프로그램

을 유치하고자 하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아직도 받아들이는 교육에 매달려 있다. 교육영역에서 우리나라가 선점할 수 있는 세계시장이 크게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식과 인력의 부족으로 필요한 정책을 제때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 국익의 차원에서 한국어를 더 많이 보급하고 한국을 이해하는 사람을 늘리기 위해서는 한국의 교육을 우리나라 안에만 가둬 둘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민 모두가 교육전문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교육에 대한 백가쟁명(百家爭鳴)식 생각과 주장이 많다. 그 때문에 교육관련 정책을 새롭게 펼치기가 쉽지 않은 나라이다. 그러나 그 많은 비용을 들이고서도 제대로 된 교육을 볼 수 없다는 소리가 곳곳에서 나오는 현실을 이대로 놔 둘 수는 없지 않은가. 지금의 혼돈상태를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논리와 방법을 제시하는 대통령 후보자를 하루빨리 보고 싶다. 대학교육

#### 권태한

서울대학교 무역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국제경제학과에서 경제학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전국대학연구처장협의회 부회장, 일리노이 주립대학 경제학과 방문교수, 광운대학교 기획처 처장 등을 역임하였고, 2003년 교육인적자원부장관겸부총리 표창을 수상하였으며, 현재 광운대학교 경영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및 광운대학교 대외협력처 처장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저서 및 논문으로는 『경제학문헌연보』, 『무역학개론』, 『경제와 생활』, 『동아시아 경제론』(공저), 『경제자유화에 따른 일본의 산업정책적 대응방안 연구』, 『경제개발기 이전의 한국 환율제도』 등 다수가 있다.